



FTA환경변화에 따른 우리축산업의 대응

윤봉 중회장
축산신문사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문제를 놓고 찬반논란이 거세다. 미국은 세계1위의 농업강국 일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적으로도 우리에게 막강한 파워를 행사 할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쇠고기를 비롯한 축산물의 경우 관세철폐대상제외품목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한미 FTA협정을 찬성하는 의견도 만만찮다. 국민소득 3만달러시대의 선진통상국가로 발돋움하는데 따른 일본의 집요한 견제와 중국의 치열한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논리를 내세운다. 통상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개혁을 통해 공정한 경쟁력 확보는 물론 생산성증대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우리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찬성론자들은 시장개방은 우리의 생존을 위해 불가피한 전략임을 내세운다. 뿐만 아니라 한미 FTA가 체결되어도 우리 농업에 큰 피해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도 제기한다.

그이유로 칠레와의 FTA체결로 인해 포도주와 포도의 수입이 크게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시중 포도 값은 FTA체결 전과 큰 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예로 든다.

또한 밥상용 수입 미국 쌀(칼로스)의 시중판매 낙찰률이 0%였음에도 의미를 둔다. 미국 쌀에 대한 품질과 안전성 문제 등을 소비자들이 우려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말한다.

한미 FTA를 반대하는 견해는 이와는 다르다. 미국과 FTA를 체결할 경우 우리 농업, 따라서 축산부문은 살아남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축산물 수입 관세(쇠고기40%, 돼지고기25%등)가 철폐되거나 대폭 축소될 경우 지금의 경영여건으로는 산업자체가 초토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국내 축산물가격이 유지되는 것은 관세로 보호막을 쳐 놓은 상태에서 미국의 광우병 발생으로 장기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중단 된데다 각종 소모성질병으로 수급에 차질을 가져다 준 것이 원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예상대로 6월부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되는 데다 설상가상으로 관세가 대폭 축소되거나 철폐되는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이를 극복 할 수 있는 축산농가가 얼마나 될 것이냐에 의문을 갖는다.

특히 축산분야는 한미 FTA협정과 관련 생존권사수 차원에서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불가피한 것이라면 충분한 유예기간을 확보하는 동시 국내 축산업이 국제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인프라구축을 비롯한 각종 대책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국내 축산업은 한미 FTA와는 관계없이 여러 가지 규제와 악재에 시달리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지 않는 한 산업의 존립마저 불투명한 상황에 놓여 있어 농지법 개정을 비롯하여 축산업의 경쟁적 구조를 마련 할 것을 제시해 놓고 있다.

축산업의 경쟁적 구조 확보는 단순히 축산업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국제경쟁이 취약한 쌀 산업의 생산조절은 물론 쌀의 품질제고를 위해 축산분뇨를 양질의 퇴비로 활용하는 등 쌀과 축산을 상호보완적으로 발전시킨다면 그야말로 농업의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는 견해다.

우리나라는 연간 약 3천5~6백만 섬의 쌀이 생산되어 매년 4백여만 섬의 쌀이 남아돌고 또 수입쌀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반면 국내 소비량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음은 여러 가지 통계가 증명하고 있다. 주목되는 것은 올 농업예산 9조원 가운데 4조원이 쌀과 관련된 예산일 뿐만 아니라, 소득 결손보전 또는 재고처리 등에 무려 2조9천억이란 천문학적예산을 쏟아 넣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식생활 서구화 영향으로 쌀 소비는 계속 줄고 우유와 육류를 비롯한 동물성 단백질 식량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국민 한사람의 쌀 소비량이 80kg인데 오는 2015년쯤 되면 60kg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따라서 현재의 20%(20만 헥타)에 해당하는 농지를 더 줄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연구보고서도 있다.

쌀 생산과 수입량은 매년 증가하는데 반해 소비는 상대적으로 줄어들면 수급불균형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이로 인해 정부의 재정 부담이 더욱 늘어나는 악순환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관점에서 쌀 생산도 조절하면서 농지를 보전할 수 있는 친환경 축산업 육성은 한미 FTA 협상을 비롯한 국내외 환경변화에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임이 강조된다. 이 같은 맥락에서 농지법개정을 비롯한 한미 FTA에 대비해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 할 수 있는 특별법제정을 통해 축산업이 쌀 산업과 조화하면서 보다 발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가축개량을 비롯한 생산성향상에 대한 투자확대는 물론 국제 경쟁여건을 갖추는 인프라구축에 적극 나설 것을 거듭 강조한다.